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권익위,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들과 공직사회 기득권 막기 위해 머리 맞댄다('22.11.4)
- ② 국민권익위, '한국 반부패 정책 성과'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IACA) 공유('22.11.28)
- ③ 국민권익위,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지원 나선다('22.11.22)
- ④ 국민권익위,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에 한국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청렴포털' 운영 경험 공유한다"('22.11.4)
- ⑤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정책 아태·아프리카 7개국에 직접 전수('22.11.23)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국민권익위,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들과 공직사회 기득권 막기 위해 머리 맞댄다

4일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
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22. 11. 4. 국민권익위)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전관·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를 주제로 토론한다.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을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 역시 지적된다. 이에 2분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3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조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을 주제로 논의한다. 2010년 「공공감사법」 제정 이후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내부직원 위주로 감사관이 임용돼 온정적 감사행태가 만연한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의 공공조직의 내부 개방성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청렴·준법전담기구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

I. 추진배경

- 지난 LH 임직원·대장동개발 땅투기 의혹 등에서 드러난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과 전관특혜 관행은 공정사회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
- ※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4대 원칙 : 국익·실용·공정·상식

▷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음
- 2022. 6.21. 국무회의 -

▷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음
- 2022.10.11. 국무회의 -

- 따라서 공직사회 공정문화 정착의 '걸림돌'인 기득권 카르텔과 전관특혜를 해소,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

II. 공청회 개요

- **주제** :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

구 분	발제 주제
제1세션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제2세션	전관특혜·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
제3세션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도 도입

- **일 시** : '22.11.04.(금) 10:00~15:00 (300분)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공동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책학회
- **진행방식** : 지정토론 및 현장 질의·응답(방청석) 등
- **참석대상** : 관계기관, 학계·연구기관,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

Ⅲ.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 개회 및 국민의례	오세창 사무관
10:05~10:20	▶ 인사말씀 ▶ 인사말씀	국민권익위원장 한국정책학회회장
10:20~10:35	▶ 제1세션 주제발표 (국정과제 :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10:35~11:25	▶ 지정토론(4인) - 관계기관 : 주요부처 담당 부서장 - 학계 : 중앙대 교수 심준섭 - 유관단체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 언론계 :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세정	박희봉 (현 한국공공관리학회회장)
11:35~11:50	▶ 제2세션 주제발표 (전관특혜·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	윤효석 제도개선전문위원
11:50~12:40	▶ 지정토론(4인) - 관계기관 : 주요부처 담당 부서장 - 학계 : 경희대 교수 김광구 - 유관단체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승제 - 법조계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영민	문병기 (전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12:40~13:30	점심식사	
13:30~13:45	▶ 제3세션 주제발표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13:45~14:35	▶ 지정토론(4인) - 관계기관 : 주요부처 담당 부서장 - 학계 : 경북대 교수 정홍상 - 유관단체 : 준법감시협의회 회장 설광호 - NGO :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유한범	강제상 (전 한국행정학회회장)
14:35~14:50	▶ 현장 질의·응답(방청석)	
14:50~14:55	▶ 마무리 말씀	김태규 부위원장
14:55~15:00	▶ 폐회 및 마무리	오세창 사무관

국민권익위, '한국 반부패 정책 성과'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IACA) 공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행위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강화 등 주요 내용 발표

(22. 11. 28. 국민권익위)

이번 달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하는 국제반부패아카데미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이하 IACA) 당사국 총회에서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76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제11차 IACA 당사국 총회에 정부대표단(단장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을 보내 반부패 주요 성과를 공유한다.

IACA는 2010년 오스트리아에서 개관한 국제 반부패 교육·연구 전담 국제 기구로, 2012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각국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반부패 현황, IACA 2021년~2024년 업무 프로그램 이행 보고, 부패측정 지표개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모금 활동 등에 대한 의제를 논의한다.

이날 정부대표단은 ▲ 올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주

요 내용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를 강화한 개정된 '부패방지
권익위법' ▲ 디지털 반부패 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의 개도국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반부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경험은 국제사회의 반부패 교육과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반부패 교육 및 연구에 있어 협력할 분야가 있다면 앞으로 IACA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지원 나선다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요청으로
22일부터 이틀간 반부패 기술지원 연수회 개최*

(22. 11. 22. 국민권익위)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부패방지위원회(KPK) 요청으로 우리나
라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인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 및 주요 사
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부터 이틀간 인도
네시아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반부패 기술지원 연
수회를 개최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한 후 법
령 소관기관에 권고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7월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때 반부패 정책교류
논의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인도네시아 반부패 정책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KPK) 모니
터링 부서 실무진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중 필요한 경험과

주요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연수회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토대로 2020년 발간한 인도네시아 부패영향평가 안내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2009년 인도네시아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국내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반부패 정책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에 한국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청렴포털’ 운영 경험 공유한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온라인 착수보고회 개최

(22. 11. 4. 국민권익위)

개발도상국가에 디지털 기반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청렴포털 공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3일 ‘청렴포털’ 공유 사업대상국인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3개국과 온라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렴포털’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이다.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을 통해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안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장, 몽골 부패방지청 실장,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장, 코소보 반부패위원장 및 UNDP 국가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각국의 기존 반부패 관련 시스템 현황과 디지털 기술 기반 반부패 시스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공유했다. 또한, 청렴포털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6월 '디지털 기술 기반 반부패 시스템 공유사업'에 관심이 있는 30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9월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 시스템 공유를 희망하는 다수 국가가 사업에 지원했고,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코소보가 최종 협력국으로 선정됐다.

몽골은 이번 전자정부를 위해 자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현재 몽골 국민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높은 디지털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몽골은 이러한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접근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반부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과 코소보는 국민권익위로부터 각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018년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공유받아 지금까지 반부패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번 청렴포털 공유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간 디지털 반부패시스템 운영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안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소장은, "2015년부터 반부패 정책 공유 사업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와 청렴포털 공유 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다"라며, "청렴포털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척결을 강조하는 UNDP 디지털전략(2022-2025) 이행에 훌륭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 추진되는 청렴포털 공유 협력사업이 각국의 청렴성 증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도 반부패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국민권익위-UNDP 협력사업 성과

□ 추진 배경

- UNDP 측 제안에 따라 개도국 대상 한국의 반부패 정책 공유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MOU 체결('15.12.4.)

*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UNDP 총재보(Assistant Administrator) 간 MOU 최초 체결 이후 ('18.1월) 1차 연장, ('19.12월) 2차 연장, ('21.12월) 3차 연장

□ 협력 성과

- ✓ 현재까지 부패방지 시책평가(AIA) 및 부패영향평가(CRA) 11개국 공유 및 '22년부터 청렴포털 공유 사업 신규 추진 중
 - (AIA) 베트남, 몰도바, 이라크, 말레이시아, 우즈벡, 알제리, 아프간, 몬테네그로 8개국
 - (CRA) 미얀마, 코소보, 아프간, 콜롬비아 4개국

연도	내용
2016년~2017년	베트남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공유사업 실시 - 베트남 감찰원, 63개 성 인민위원회 대상 시범평가('16.7.~12.), -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17.3.16, 하노이), - 권익위-UNDP 공동 베트남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17.10.24.~26., 세종)
2017년	몰도바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수 실시 - 반부패 정책 연수('17.11.21~22) - 부패방지 시책평가 웨비나('19.7.4)
2018년	미얀마·코소보 대상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유사업 실시 - 미얀마(웨비나 2.28., 초청연수 5.30.~6.1.), - 코소보(웨비나 3.7., 초청연수 4.23.~27.)
	이라크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공유사업 실시 - 웨비나('18.3.6.), 초청연수('18.8.28.~30.)
2019년	말레이시아·우즈벡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공유사업 - 말레이(웨비나 1.24., 초청연수 4.24.~26.), - 우즈벡(웨비나 3.11., 초청연수 9.3.~5.)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공동 워크숍 개최('12.2. 서울) - 청렴정책의 국가 간 전수 성공사례와 교훈 : 한국-파트너국-UNDP 협력사업의 경험
2021년	반부패 정책 공유 협력사업 국가 선정 및 사업 실시 - 아프가니스탄(3.30. AIA·CRA), 콜롬비아(4.21. CRA), 알제리(4.28. AIA), 몬테네그로(9.2., AIA)
2022년	몽골·우즈베키스탄·코소보 대상 '청렴포털' 공유 사업 실시

국민권익위 - UNDP 서울정책센터



몽골 착수보고회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정책 아태·아프리카 7개국에 직접 전수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 10일간 교육 마치고 23일 수료식 개최

(22. 11. 2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7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하는 과정이 마무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14일부터 “제10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열흘간 운영하고 23일 서울에서 수료식을 개최한다.

올해 연수에는 네팔,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7개국에서 총 13명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해외 국가들의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이를 위해 ▲청렴도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특히,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국민권익위 공무원을 강사로 섭외해 제도를

시행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올해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도 함께 구성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직접 아시아-태평양지역의 UN반부패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육생인 7개국 공무원들이 국제기구의 반부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사회에서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0일간의 연수를 마친 교육생들은 23일 오전 서울 포포인츠 명동호텔에서 수료식을 갖는다. 수료식은 전현희 위원장의 수료증 수여 및 환송사, 연수생들의 소감 발표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다국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IT 기반 반부패 시스템 등을 교육한다.

올해로 10년차를 맞은 다국가 연수과정은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영어로만 연수를 진행했으나, 2020년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몽골 등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의 요청에 맞춰 러시아어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불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세계 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